

# 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시급근로자에 근무시간 계획 미리 알려줘야	뉴욕
사회·복지	3	양성평등 전략 핵심주제 수록 토론용 보고서 발간	빅토리아
	6	자살률 2025년까지 현재의 50%로 줄인다	빅토리아
	8	임신·출산·육아 지원 등 어린이 종합계획 수립	오사카
행정·교육	10	중고교에 의사 정기 방문해 의료서비스 제공	빅토리아
환경·안전	12	지진·해일 피난·복구대책 등 담은 실행계획 수립	오사카
정보·기타	14	의약품 시판권, 연구개발기구·개발자에도 부여	상하이

## 시급근로자에 근무시간 계획 미리 알려줘야

조례 추진...패스트푸드점 업자, 최소 2주 전에 공지 의무화

미국 뉴욕시 / 사회·복지

- 미국 뉴욕시는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시급근로자들이 부양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급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‘페어 워크유크(Fair Workweek)’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2016년 9월 발표
  
- 배경
  - 뉴욕시 패스트푸드 매장의 시급근로자 수는 65,000명에 달함.
  -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시급근로자 자리를 찾는 저소득층이 증가
  -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종업원들에게 대기토록 하다가 갑자기 근무 지시를 하는 이른바 ‘온 콜(On Call)’ 근무 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  
- 문제점
  - 일자리 수보다 많은 시급근로자
    - 근무시간이 고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정해짐.
    - 갑작스러운 변동에도 부담함을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
  
  -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근무시간의 결여
    - 불안정한 가정생활
    - 돌봐야 할 자녀가 있으면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병원, 학교, 기타 교육 및 육아에 어려움이 있음.
  
  - 공정한 스케줄링(Fair Scheduling) 부재
    - 근로가정에서는 며칠 또는 몇 달 후의 계획을 짜기가 불가능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

- 패스트푸드점의 업주는 시간제근로자에게 최소 2주 전에 근무시간이나 변경된 근무시간 계획을 미리 공지해야 함.
  - 고용주가 임의로 근무일정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일할 때 추가 보상금을 지급
  
- 전날 마감업무를 하고 다음날 개장업무를 연이어 하는 ‘클로프닝(Clopening)’ 업무는 근무 간 간격이 최소 10시간 이상이어야 함.

<http://www1.nyc.gov/office-of-the-mayor/news/736-16/mayor-de-blasio-council-members-advocates-plan-ensure-new-york-city-s-fast-food/#/0>

# 사회·복지

## 양성평등 전략 핵심주제 수록 토론용 보고서 발간

호주 빅토리아주 / 사회·복지

- 호주 빅토리아주는 ‘양성평등전략(Gender Equality Strategy)’의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련 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한 토론용 보고서(Discussion Paper)를 2016년 8월 발간
  - 토론용 보고서에는 최종 보고서에 수록할 5가지의 핵심 주제와 우선순위를 명시하고, 앞으로 진행될 최종 자문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수록
  - 핵심 주제는 ① 교육, ② 경제활동 참여, ③ 리더십, ④ 건강 및 여성에 대한 폭력, ⑤ 문화, 스포츠 및 기업 혁신임.
  
- 배경
  - 호주는 세계경제포럼(WEF)이 발표하는 ‘세계 양성 격차지수(Global Gender Gap Index)’에서 53위를 차지
  - 앞으로 혁신적인 정책개입이 없으면 양성평등에 도달하는 데 117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.
  
- 교육
  - 양성 불평등 주요 사례
    - 고등교육 전공 선택에 수반되는 양성 고정관념
    - 향후 고용기회가 많은 STEM(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 & Mathematics) 분야 전공 여학생은 14%에 불과
  
  - 전략 및 실행계획
    - 남성 중심의 전공분야 및 직업에 여성의 비율 증가
    -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간의 협력사업으로 여학생들에게 STEM 분야의 직업 경험 및 노출 증가

- 경제활동 참여
  - 양성 불평등 주요 사례
    -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71.4%이지만 여성은 58.8%임.
    - 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연간 임금격차는 15,000호주달러(1,270만 원)
    - 여성 2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임신, 육아, 직장복귀에 관련된 차별을 경험
    - 여성은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무급 돌봄 역할에 사용
  - 전략 및 실행계획
    - 여성을 고려한 유연근로제 개발
    - 여성의 근로 활동 기회 및 재정안정을 지원하는 기업에 포상
    - 임신·돌봄과 관련된 휴가사용에 대한 재정지원
- 리더십
  - 양성 불평등 주요 사례
    - 주정부 의원 128명 중 여성은 50명뿐
    - 공무원의 67%가 여성이지만 고위직은 37%에 불과
  - 전략 및 실행계획
    - 의회 및 정부 행정직에 여성 비율 할당제를 도입
    - 민간기업 임원의 성비 균형을 촉진할 수 있는 ‘양성의식(Gender Conscious)’ 가이드 발간 및 교육
- 건강 및 여성에 대한 폭력
  - 양성 불평등 주요 사례
    - 15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, 5명 중 1명은 성적 폭력을 경험함.
    - 가정폭력은 중년여성들의 주요 사망원인임.
  - 전략 및 실행계획
    - 여성들의 건강 욕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정부기구를 마련
    - 직장이나 온라인상에서 여성차별로 나타나는 정신건강문제 연구

- 문화, 스포츠 및 기업 혁신
  - 양성 불평등 주요 사례
    - 여성들의 문화·스포츠 활동 및 기업혁신 활동 등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지원
    - 남성 운동선수의 스포츠 분야 지배와 불평등한 고정관념
  - 전략 및 실행계획
    - 여성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스포츠 시설 확충
    - 성적(性的)으로 평등한 운동선수 보상체계를 마련
    - 여성이 경영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
  
- 향후 고려사항
  - 분야별로 여성들의 권익 신장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
  -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일과 정부의 지원 방법
  - 정부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
  - 양성평등 보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등
  
- 기타사항
  - 최종 보고서는 앞으로 주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의 청사진으로 활용할 예정
  - 양성평등전략의 세부목표, 세부 실행계획 및 측정 가능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임.

<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victorians-create-blueprint-for-gender-equality/>

[http://dpc.vic.gov.au/images/documents/Victorian\\_Gender\\_Equality\\_Strategy\\_Discussion\\_Paper.pdf](http://dpc.vic.gov.au/images/documents/Victorian_Gender_Equality_Strategy_Discussion_Paper.pdf)

# 자살률 2025년까지 현재의 50%로 줄인다

호주 빅토리아주 / 사회·복지

- 호주 빅토리아주는 2015년 수립한 ‘정신건강 10개년 계획’ 중 하나로 현재의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‘자살방지 기본구상(Victorian Suicide Prevention Framework 2016-2025)’을 수립
  - ‘정신건강 10개년 계획’에서는 자살방지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
  - 주정부는 ‘정신건강 10개년 계획’에 3억 5,600만 호주달러(3,024억 원)의 예산을 배정하고, 이 중 2,700만 호주달러(230억 원)를 ‘자살방지 기본구상’에 사용할 예정
  
- 배경
  - 2014년 자살로 숨진 사망자 수는 64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0.8명임.
  - 지난 10년간 자살 사망자의 수와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
  - 특히 85세 이상의 남성 노인, 도시보다는 외곽지역 거주자, 원주민들의 자살률이 높음.
  
- 주요 내용
  - 회복탄력성 구축(Build Resilience)
    - 개인과 지역사회를 활용하여 자살방지 능력을 신장
    - 학교, 보건기관, 응급서비스 기구의 자살방지 및 대응 역할 강화
    - 교과 과정에 ‘상호 존중하는 관계(Respectful Relationship)’ 과목을 신설하여 결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
    - 학교 내 성소수자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 ‘안전한 학교 연대(Sage School Coalition Victoria)’와 협력
  
  - 취약계층 지원
    - 스트레스와 자살 위험이 큰 집단을 발굴해 집단별로 표적화된 개입전략을 구축
    - 집단별로 특화된 정신건강축진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 지원

- 자살행위자 보호
  -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서비스 확대
  - 의료기관, 지역사회, 가족을 활용한 지지 보호망 구축
  - 병원 치료 후 1년 이내에 자살 시도율이 높으므로 이에 기초한 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
  - 퇴원 후 24시간 이내에 치료와 상담 등의 후속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1년간 지속해서 보호
  
- 최적의 개입방법 연구 개발
  - 현행 자살방지 개입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
  - 응급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자살행위 관련 통계 구축
  
- 자살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지원
  - 지역사회별 자살방지 실행계획수립 지원
  - 경찰, 응급서비스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방지훈련을 3년마다 실시
  - 지역별로 자살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

<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halving-the-rate-of-suicide-in-victoria/>

<https://www2.health.vic.gov.au/about/publications/policiesandguidelines/victorian-suicide-prevention-framework-2016-2025>



## 임신·출산·육아 지원 등 어린이 종합계획 수립

일본 오사카府 / 사회·복지

- 일본 오사카府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‘오사카부 어린이 종합계획(大阪府子ども総合計画)’을 2015년 수립
  - 오사카부는 ‘젊은 세대의 자립’, ‘임신·출산 및 육아지원’, ‘어린이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’를 이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설정
  
- 젊은 세대의 자립
  - 산업인재 육성 추진
    - 산업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함께 장기 인턴십과 PBL(Project Based Learning, 프로젝트 기반 학습) 등을 추진
  
  - 청년층의 취업지원 강화
    -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교육 및 인재육성
    - 청년층이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경력상담, 세미나, 매칭, 직장정착 지원 등의 취업지원과 직업상담, 취업훈련 체험 등을 시행
  
  - 마을단위와 연계한 지역지원 네트워크 구축
    -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히키코모리(引きこもり)를 대상으로 상담, 사회참여,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단위 또는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
  
  - 장애인 고용촉진 및 취업·정착 지원
  
- 임신·출산 및 육아지원
  - 건강한 임신과 출산 추진
    -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산모를 초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정비
    - 불임치료 지원
  
  - 한부모 가정의 자립 촉진
    - 한 부모가 되었을 때 초기 단계부터 상담·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 
  - 육아 가정을 지역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

- 사회적 양호체계 정비
  - 보호시설에서 최대한 가정적인 양육환경이 되도록 소규모 그룹 관리 및 그룹 홈 설치를 추진
  -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보호체계 정비
  
- 장애인 학생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
  
- 외국인과 귀국자 자녀 등의 지원
  
- 어린이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
  - 어린이 교육
    -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의 보육교육 내용을 보완
    - 인성교육의 보완을 위해 인권교육과 도덕교육을 추진
  
  - 어린이 놀이터 확보
  
  - 왕따나 등교 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, 학교,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
  
  - 청소년 주변의 환경 정비
    -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필터링 절차 강화
    - 경찰이나 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활용을 위한 노력 강화

<http://www.pref.osaka.lg.jp/kosodateshien/keikaku/>

[https://docs.google.com/viewer?url=http%3A%2F%2Fwww.pref.osaka.lg.jp%2Fattach%2F909%2F00000000%2Fkodomokeikaku\\_gaiyou.docx](https://docs.google.com/viewer?url=http%3A%2F%2Fwww.pref.osaka.lg.jp%2Fattach%2F909%2F00000000%2Fkodomokeikaku_gaiyou.docx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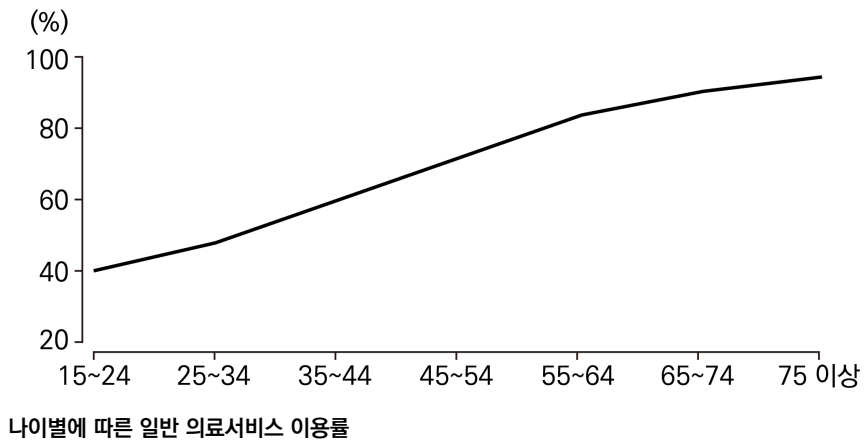
[https://docs.google.com/viewer?url=http%3A%2F%2Fwww.pref.osaka.lg.jp%2Fattach%2F909%2F00000000%2Fkodomokeikaku\\_hontai%2520.docx](https://docs.google.com/viewer?url=http%3A%2F%2Fwww.pref.osaka.lg.jp%2Fattach%2F909%2F00000000%2Fkodomokeikaku_hontai%2520.docx)

# 행재정·교육

## 중고교에 의사 정기 방문해 의료서비스 제공

호주 빅토리아주 / 행재정·교육

- 호주 빅토리아주는 중·고등학생들에게 1차 의료 진료를 제공하여 건강문제의 조기 발견 및 해결과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사가 학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(Doctors in Secondary Schools Program)을 2016년 9월부터 시행
- 배경
  - 청소년기는 다양한 의료욕구가 발달하는 시기이나,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낮음.
  - 청소년들이 주로 직면하는 건강문제는 정신건강, 약물사용, 비만, 폭력 및 학대로 인한 신체상의 문제 등임.



- 운영 개요
  - 의사의 방문
    - 주정부가 의사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사를 알선
    - 의사는 매주 1회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

- 학교의 준비사항
  - 프로그램 담당자 선정
  - 담당자는 주정부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.
  - 교육과정에는 청소년기의 건강, 방문 의사의 역할, 프로그램 운영 실무 등이 포함됨.
  - 진료실 제공
  - 진료실은 교실이나 방을 진료목적에 맞게 고치면 됨.
  - 진료실 준비에 드는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함.
  
- 프로그램 예산
  - 교육 및 운영비 2,580만 호주달러(220억 원)
  - 진료실 설치비 1,800만 호주달러(153억 원)
  
- 참가 학교 선정
  -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
  - 빅토리아주는 참가 학교 선정의 1차 원칙으로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‘학부모의 직업과 교육 지수(Student Family Occupation and Education Index)’를 통해 166개의 학교를 선정
  - 이 중 참가의사를 표명한 135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외곽지역의 학교들과 최근 인구가 급증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100개의 학교를 선정
  
- 프로그램의 시행
  - 이 프로그램은 방문 의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7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, 나머지 학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

<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100-victorian-secondary-schools-to-get-a-doctor/>

<http://www.education.vic.gov.au/about/programs/health/Pages/doctors-secondary-schools.aspx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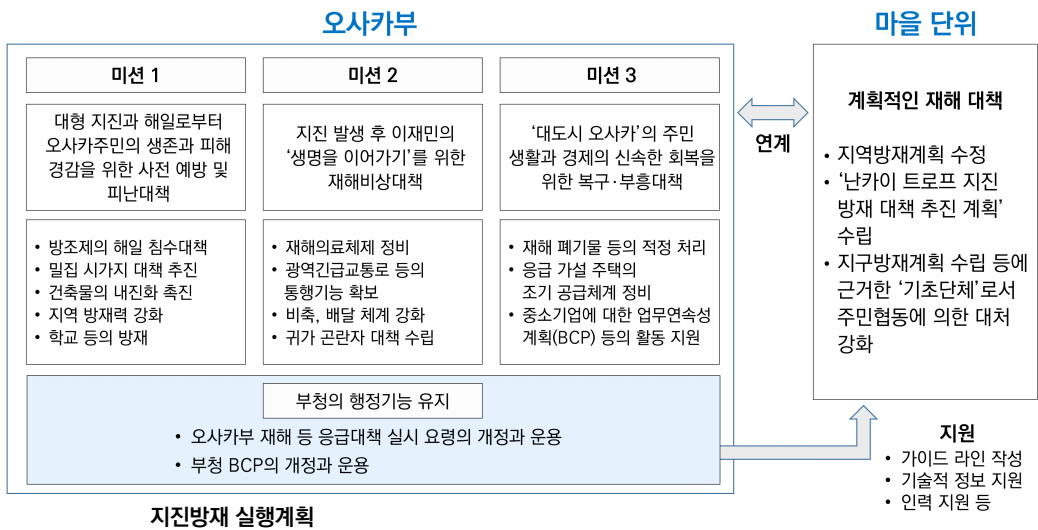
<http://www.abs.gov.au/ausstats/abs@.nsf/Lookup/by%20Subject/1301.0~2012~Main%20Features~Health%20service%20usage%20and%20experiences%20of%20care~234>

# 환경·안전

## 지진·해일 피난·복구대책 등 담은 실행계획 수립

일본 오사카府 / 환경·안전

- 일본 오사카府는 지진이나 해일의 사전 예방 및 피난대책, 지진 발생 이후 비상대책과 신속한 복구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'지진방재 실행계획(新·大阪府地震防災アクションプラン)'을 2015년 3월 수립
  - 이 계획은 3개의 미션과 행정기능 유지, 지역과의 연계로 구성됨.



- 미션 1: 지진과 해일로부터 주민의 생존과 피해경감을 위한 사전 예방 및 피난대책
  - 밀집 시가지 대책 추진
  - 방화(防火)지역 등의 지정 촉진
  - 지하공간대책 촉진
  - 학교의 내진화
  -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내진화
  - 정확한 대피 권고 등의 판단과 전달 지원
  - 미디어와의 연계 강화
  - 외국인 여행자의 안전 확보
  - 문화재 보유자·관리자의 방재의식 계발

- 미션 2: 지진 발생 이후 이재민을 위한 재해비상대책
  - 재해 발생 시 의료시스템 정비
  - 광역수송거점의 임시 의료시설 운영체계 확보 및 강화
  - 의약품, 의료용 기자재 확보
  - 광역긴급교통로 등의 통행기능 확보
  - 수도의 조기 복구 및 음용수 확보
  - 귀가 곤란자 대책 수립
  - ‘재난심리지원단’을 구성하여 이재민의 심리치료 시행
  
- 미션 3: 오사카 주민의 생활과 경제회복을 위한 복구 및 부흥 대책
  - 재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
  - 중소기업의 BCP 및 BCM 활동 지원
    - BCP(Business Continuity Planning, 업무연속성계획)
    - BCM(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, 업무연속성관리)
  
- 행정기능 유지
  - 오사카부의 방재행정을 신속·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
  - 재해 발생 시 대 시민 홍보시스템 정비
  - 구조대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
  - 재해 발생 이후의 긴급 재무처리시스템 구축
  
- 마을단위의 계획적인 재해대책 추진 지원
  - 마을단위 지역방재계획의 수립 및 개정 지원
  - 지구방재계획 수립 지원
  - 지진재해에 대비한 마을 지원

[http://www.pref.osaka.lg.jp/kikikanri/new\\_actionplan/index.html](http://www.pref.osaka.lg.jp/kikikanri/new_actionplan/index.html)

[https://docs.google.com/viewer?url=http%3A%2F%2Fwww.pref.osaka.lg.jp%2Fattach%2F24877%2F00000000%2Fshin\\_actionplan\\_0\\_summary.docx](https://docs.google.com/viewer?url=http%3A%2F%2Fwww.pref.osaka.lg.jp%2Fattach%2F24877%2F00000000%2Fshin_actionplan_0_summary.docx)

## 정보·기타

### 의약품 시판권, 연구개발기구·개발자에도 부여

중국 상하이시 / 정보·기타

- 중국 상하이시는 의약품 제조사에만 부여했던 의약품 시판권을 의약품 연구개발기구 및 개발자에게 부여하는 ‘의약품 시판승인 취득자 제도(上海市开展药品上市许可持有人制度)’를 2016년 7월부터 시행
  - 상하이시는 연구기관과 개발자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우대정책을 시행할 예정
  
- 배경
  - 2015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상하이시를 포함한 10개의 지자체에 ‘의약품 시판승인 취득자 제도’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
  - 상하이시는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 내 최대 하이테크 단지인 장강 하이테크 단지의 지원에 만전을 기울임.
  
- 주요 내용
  - 의약품 연구기관 및 개발자가 제조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의약품 허가를 취득해 시판할 수 있으며,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, 품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.
  - 의약품 시판 허가를 취득한 후 해당 지역 내 의약품 제조사를 통해 위탁 생산도 가능
  - 시는 의약품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접수창구, 심사시간, 필요서류 등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제공
  
- 우대정책 내용
  - 장강 하이테크 단지에 입주한 의약품 개발업체 및 생산위탁 제조사를 대상으로 위험구제기금을 설립
  - 이들 기업이 상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에 보조금을 지급

- 일부 약품의 개발자는 시험제품을 사전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 지원과 함께 행정서비스도 제공
- 기대사항
  - 중국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신약의 상용화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개발자의 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
- 향후 계획
  - 중국 국무원은 10개 도시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적인 도입을 검토할 예정

<http://www.yigoonet.com/article/22331592.html>

<http://www.shanghai.gov.cn/nw2/nw2314/nw2319/nw12344/u26aw48315.html>

<http://xuke.shfda.gov.cn/AppRoveManage/SQ0106CatalogController/itemDepartment>

<http://www.shanghai.gov.cn/nw2/nw2314/nw3124/nw18452/nw20020/u21aw1151512.html>